

민주당, 文정부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

당·정·청 ‘3각 공조’ 구축
에너지·통신비·의무교육 등
쟁점 20여개 전담 TF 구성
25일 전 주요 입법 과제 선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청 3각 공조를 통해 속도전을 준비 중이다.

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말 열리는 의원 워크숍 전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번 주부터 중점 법안 추려내기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당정 협의와 고위 당·정·청이관 ‘투트랙 루트’를 활용, 효율적인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당·정·청 간 역할 분담을 하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분석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 작업이 필요한 과제(91개)에서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만 해도 432건에 이른다. 민주당은 이를 대상으로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여야 공통공약 등을 들어 ‘가치치기’를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 가운데 올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 110여 건”이라며 “여야 교섭단체 4당이 공통공약으로 한 것은 60여 건인데 올해 제출 법안하고 일부 겹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부처와의 소규모 당정 협의를 열어 입법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출된 과제를 취합하면 정기국회 때 입법 추진할 법안이 되는 셈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입장에서 국정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지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고칠 수가 없으니 그런 차원에서 한변 상임위 별로 실무적인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당정과 더불어 지도부 차원의 고위 당·정·청 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청의 ‘3각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을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의원별 입법 담당제(당), 과제별 이행 정도 평가(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구성(청와대)이 구상의 핵심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정책실장 산하에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책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당에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별 담당제를 두기로 했다”며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과제별 진척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둔다”고 말했다.

특히 당에서는 쟁점 법안을 다룰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여야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대

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통신비, 의무교육, 부동산 문제 등 쟁점이 큰 사안들이 20개 정도 될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별로 견해가 다르거나 하는 사안을 다룰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소규모 당정, 쟁점 법안 TF 운영 등을 통해 이달 25~26일 예정된 워크숍 전에는 핵심 법안들을 최종 도출하기로 했다.

일단 국정원법 등 야당이 반발하는 쟁점 법안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신중한 전략을 펴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10여 건을 우선 법안으로 제출해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공통공약 부분도 먼저해보자고 얘기해 순조롭게 되면 쟁점이 되는 나머지 법안이나 야당의 관심 법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임기 중 출마 의원·지자체장
선거비용 반환 개정안 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전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 중 사퇴한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한 비용은 국기와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 자진사퇴나 당선 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재보궐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선거 관리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홍 의원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등의 이유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정부가 2019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된 6일 시내 고층빌딩에서 바라본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년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휴가 중 ‘명견만리’ 읽어

지난 5일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한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읽은 도서 ‘명견만리(明見萬里)’의 일독을 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 북을 통해 “휴가 중 읽은 명견만리는 누구에게나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밝혔다.

명견만리는 여러 분야의 저명 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KBS 프로그램 ‘명견만리’의 내용을 엮은 책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밀려오는 지금, 명견만리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지금까지와 다르다면 정치도 정책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 권이지만 쉽고 재밌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한편, 정부가 2019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는 한해 앞선 2018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그곳에서 건물을 빌려 쓰다가



2021년 새로 완공되는 세종시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이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중에 서울청사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가 시작되고, 2019년 집무실 설치와 이전 작업이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취임 2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적폐 예산 검증” 野 “부자증세 저지”

8월 국회 기싸움 팽팽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지출’을 낚아미 밝히겠다는 입장과, 국민의당 역시 전임 정부의 썸씀이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임시 국회를 9월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입법전쟁’의 전초전으로 여기며 칼날을 베풀고 있다.

우선 여야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휴가 및 지역일정 등을 고려해서 21일부터 열흘간 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임기 중에 쓴 예산 중 낭비성·위법성 지출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국정농단과 관련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면 이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한 예산 중 최순실 씨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과 관련된 사업이 모두 16개로, 총 3227억 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산안 심사 외에도 민주당은 8월 임

시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을 추려 심의·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전임 박근혜 정부의 예산집행 현황을 ‘핀셋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전임 정부에서 이에 반하는 형세 투입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 기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결산안 심사 목적이 큰 임시국회를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장(場)으로 삼아 일찌감치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의 이른바 초고소득자 증세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집중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인상이나 양도세 증과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있기는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대부분이 몰려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초고소득자 증세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내용을 당시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해오고 있다. 이 밖에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 등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당의 반격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내년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

기재부, 국민소득 전망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이 2만9000달러를 넘어 내년에는 마침내 ‘3만달러’의 벽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500달러로 전년(2만7100달러) 대비 400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저성장에도 작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60.5원(매매기준 환율)으로 전년도보다 2.6% 상승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 2만9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42원이었고, 통계청이 추정한 올해 인구는 5144만6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명목 GDP를 올해 인구로 나누고 이를 평균환율로 계산해 달러화로 환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 대비 1700달러



(6.2%) 늘어난 2만9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5%)와 내년 인구 추계(5163만5000명)를 감안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400달러로 마침내 3만달러의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서면 참여정부 때인 2006년 2만달러대에 진입한 데 이어 12년 만에 된다. 다만, 변수는 원/달러 환율과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십시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